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목표도... 사람도... 돈도 없다?

# '현행 자치경찰제, 법·제도적 한계 봉착'

법제처·행안부 등 법적 성격에 대한 답변 회피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사무범위 해석 논란만 지속

맞춤형 치안서비스 실현 의의 있는지 의문 들어"

지난해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취지는 물론, 조직도 예산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1일 주민 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태생에 문제가 있다 보니 조직도, 예산도 없이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한 명시돼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지에 대해 법무법인과 법제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했다.

두 곳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

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것이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하다. 이점 양해바란다"고 반려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 역할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를 실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례로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가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업무를 위한 조직이나 예산이 전혀 없고,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형규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볼수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알리고 싶었다"며 "앞으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취지와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화하고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 특장차 산업, 전북 신성장동력원으로

산업부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기술융합 기반구축' 공모 선정  
도,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76억원 투입... 선도지역 자리매김 일조

전북도가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이 정부(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특장차 산업 발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에 특장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센터, 장비)와 연구개발에 5년간 국비 176억원(지방비 포함 총 297억원)이 지원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검증을 위한 장비구축, 특장차 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4억8,000만원의 국

비가 투입된다.

앞서 도는 제1특장차전문단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상용차산업과 동반성장사업이 융합한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

제1특장차전문단지(2013~2016년, 306억원)는 특장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100% 분양(31개체) 합작제 가동되고 있다.

또한, 단지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인증센터(2017년 완공)가 위치해,

특장차의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게 됐다.

도와 김제시는 제1특장차전문단지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2특장차 전문단지(2018~2023년, 667억)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특장차전문단지는 특장차(부품)기업 30개소 입주목표를 하고 있으며, 10개 기업은 이미 MOU를 체결하고, 32개 기업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완공 후, 제1특장차전문단지와 연계해 특장차(부품)기업 집적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지내 특장차산업에 체계적

도, 우수후계농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북도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20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을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전문검증기관의 평가 후 5월말 최종 확정한다.

사업 대상자는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접수 순위에 따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300명이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시설자금, 기타 자금 등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1%의 정책자금(융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한편, 도는 정부 사업과의 별도로 농정협의체인 삼각농정 회의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 컨트를 타워로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2021~2023년, 국비 84억원)도 2023년에 완공 예정에 있어, 전문단지-인증센터-종합지원센터 등 전국 최고 수준 특장차 육성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특장차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도가 특장차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대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김제 백구 특장차전문단지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장차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특장차산업을 전북 신성장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